

북한의 3대 세습 결정요인과 숨겨진 의미

이승열



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북한의 3대 세습 결정요인과 숨겨진 의미

이승열

북한의 3대 세습 결정요인과 숨겨진 의미 is an *Asia Paper* published by the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The *Asia Papers Series* is the Occasional Paper series of the Institute's Asia Program, and addresses topical and timely subjects. The Institute is based in Stockholm, Sweden, and cooperates closely with research centers worldwide. Through its Silk Road Studies Program, the Institute runs a joint Transatlantic Research and Policy Center with the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of Johns Hopkins University'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The Institute is firmly established as a leading research and policy center, serving a large and diverse community of analysts, scholars, policy-watchers, business leaders, and journalists. It is at the forefront of research on issues of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Through its applied research, publications, research cooperation, public lectures, and seminars, it functions as a focal point for academic, policy, and public discussion.

The opinions and conclusions expressed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or its sponsors.

©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2012

ISBN: 978-91-86635-35-0

Printed in Singapore

Distributed in Europe by: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Västra Finnbodavägen 2, 131 30 Stockholm-Nacka, Sweden
Tel. +46-841056953; Fax. +46-86403370
Email: info@isdpeu

Distributed in North America by:

The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1619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36
Tel. +1-202-663-7723; Fax. +1-202-663-7785
E-mail: caci2@jhuadig.admin.jhu.edu

Editorial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to Dr. Bert Edström at: bedstrom@isdpeu

북한의 3대 세습: 결정요인과 숨겨진 의미¹

I. 서론

연구자에게 포스트 김정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흥미로운 주제이다. 무엇보다 1974년 김정일이 북한의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김정일이 없는 북한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9년 등장한 3대 세습은 자연스럽게 김정일이 없는 북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

김정일이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 북한 정권 기념일 9.9절과 조선노동당 기념일인 10.10절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뇌졸중 이후 김정일의 건강 문제는 북한체제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또한 김정일의 건강문제는 북한의 3대 세습을 앞당기는 중요한 정치적 동기가 되었다. 2009년 1월, 김정일이 공식석상에 재등장하기 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삼남인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한 것이었다.

김정은의 등장과 대조적으로 2009년 1월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전임 정부인 부시 행정부와 달리, 집권 초기부터 북미 간의 직접 대화 가능성이 많은 기대를 걸 수 있었다. 북한 또한 이러한 북미간의 대화 가능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9년 4월 초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한 이후 5월 말 2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만 하기에는 숨고를 시간도 주지 않고 밀어붙이는 북한의 태도가 과거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북한내부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감지되었고, 김정은이 2009년 1월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 되었다.

북핵문제와 후계체제의 등장이 맞물리면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논쟁이 촉발되었다. 우선 북핵이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북핵은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용이 아니라 김정은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체제보위용’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군사적 긴장은 높이는 이유가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의 업적 쌓기와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핵과 후계체제는 성격이 전혀 다르며, 따라서 북핵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협상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협상 국면에서는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를 거쳐 중국적인 폐기를 논의하고 이행하지만, 협상

¹ 이 논문은 영어로 발표된 [North Korea's Third Hereditary Succession: Determining Factors and Hidden Meanings](2011)의 한국어 버전입니다.

이 중단되거나 대결이 벌어지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차후 재개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핵능력과 핵위협을 꾸준히 증대시켜왔다는 것이다.² 과연 무엇이 북한의 진짜 목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체제 내에서 후계체제가 갖는 결정 구조와 정치적 함의를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대회를 열고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에 임명했다. 북한은 하루 전날 9월 27일 김정은을 김정희, 최룡해 등과 함께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했다.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여한 것은 김정은을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공식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공식화 했다.

김정이 비록 어리고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문제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 정치체제 내에서 후계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때문이다. 북한의 혁명건설과정에서 후계자는 미래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하는 인물로서 수령과 같은 결정적 지위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이 향후 최고 권력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후계체제의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포스트 김정일’에 대한 논문이다. 여기서 필자는 북한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과 세 가지 숨겨진 의미를 제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 체제의 방향과 안정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II. 김정은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체제 과정은 후계자로 지명되는 과정에서부터 후계자의 공식직책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후계자 지명의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것은 1974년이며,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것은 2009년이다. 가장 큰 차이는 김정일은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추대되었다는 점이다. 혁명 1세대들이 1972년 이후 김정일의 후계자 추대를 공론화했고, 김일성이 이들의 추대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었다. 반면 김정은은 김정일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2009년 1월 8일 자신의 생일날 아버지 김정일에 의해 당의 공식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

둘째, 후계자를 공식화 절차에서도 김정일과 김정은은 큰 차이점이 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대내외적으로 공식화된 것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이며, 김정은의 경우에는 2010년 제 3차 당대표자대회에서 공식 결정되었다. 무엇보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약 6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후계자로 공식화되었다. 반면, 김정은은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21개월 만에 공식화됨으로써 후계자로서 준비과정없이 공식화된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후계자로 공식화 되면서 북한의 3대 요직인 정치국, 비서국, 당 중앙군사 위원회의 모두 권력을 공식 부여 받았지만,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과 인민군 대장직만 부여받음으로써 군 통수권에 편중된 권력구조를 갖추었다.

² 김근식, “협상 포기하면 결론은 무대책이다,” 프레시안 2009년 6월 29일자.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체제 과정에서의 이러한 표면적인 차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북한의 후계자론은 후계자 문제의 본질을 “후계자의 선출뿐만 아니라 선출된 후계자가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는 세 가지 결정 요인에 의해 완성된다. 첫째, 후계자의 정통성 확립이며, 둘째, 후계자의 영도체계 확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이다.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체제의 보다 본질적인 차이는 위의 세 가지 결정요인에서 더욱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1. 정통성

북한의 후계자론은 수령의 후계자가 “우선 사상이론의 대가로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어야 한다”³고 강조하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선군사상이 북한 체제의 주요한 사상이론으로 등장하였던 1998년 이후 현 시점에서 김정은은 후계자로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김정일의 선군혁명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다고 선전해야 한다.⁴

이를 위해 김정은은 후계자의 정통성을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한다. 3대 세습을 위한 후계자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후계자의 능력을 강조하거나 혹은 우상화 하는 등 매우 김정일 때와 같이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김정은에게 혈통승계의 정통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의 경우 후계자로서 정통성은 자시의 능력과 자질을 부각시키는 ‘인물본위’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만경대, 백두산 혈통’의 전통을 강조하는 ‘혈통본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 제기되고 있는 3대 세습 확립을 위한 후계자 정통성 확립을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해 보겠다.

첫째, ‘만경대 혈통과 백두의 혈통’을 통해 혈통승계의 정당성을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김정은에 대한 후계자 정통성을 확립하고 있다. 2009년 9월 대만의 사진작가 후양 한밍씨가 강원도 원산에서 찍은 선전벽보 사진은 김정은이 북한에서 수령의 후계자로 상당히 인민대중들에게 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벽보의 내용은 “장군복, 대장복 누리는 우리 민족의 영광”이라는 머리글 아래 “만경대 혈통, 백두의 혈통을 이은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를 ~ (중략) ~ 김일성민족의 앞길은 영원히 휘황 찬란하여라!”라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다.⁵ 김정은을 ‘청년대장’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며, 장군복(김정일), 대장복(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순서를 적시하고 있고, 특히 ‘만경대 혈통’과 ‘백두의 혈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은에게 수령과 장군을 잇는 3대 세습의 정통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매체 또한 김정은의 후계자 정통성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2009년 10월 9일 김정일과 주민들이 참석한 황해북도

³ 김유민, 후계자론 (서울: 신문화사, 1984), pp. 75-76.

⁴ 정성장, “북한의 정권교체, 체제변화, 한반도 통일의 조건과 전망,” 한반도 통일의 이상과 과정 (서울: 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 2009), pp. 11-12.

⁵ 상동, pp. 14-15.

예술극장 개관공연에서 김정은의 찬양가요인 ‘발걸음’이 합창 공연되는 장면을 방영했다.⁶ 또한 김정은의 28번째 생일인 1월 8일에도 <조선중앙방송>은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가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가는 주체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⁷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의 생일을 1983년 1월 8일로 선전해왔다. 그러나 김정은의 후계지명이 공식화 되었던 2009년 6월부터 출생연도를 1년 당겨 1982년으로 고쳤다. 이는 김정일이 70세가 되는 2012년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며, 이때 김정은이 30세를 맞는 정주년이기 때문이다.⁸ 즉, 100세, 70세, 30세를 인위적으로 맞춤으로서 후계자의 정통성을 만들려는 상징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조작은 과거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980년대 초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 김정은의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과대 선전함으로써 이상화를 통한 후계자 정통성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는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한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있고, 그의 선군사상과 이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선군영도의 계승자로서 정당성과 필연성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 영지와 지략을 지닌 군사의 영재”라거나 “현대 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라고 군사적 재능과 과학기술의 경력을 위주로 선전하고 있다.

선군정치를 이끌어 갈 김정은의 탁월한 능력을 선전하기 위해 북한의 교양자료에서는 특히 그가 포병전에 능하며 북한군이 위성항법장치(GPS) 수신기와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지도를 활용하는 것도 김정은의 아이디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2010년 초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벌인 포사격 훈련은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조선중앙방송>이 2월 16일 방영한 북한군 포사격 장면은 김정일이 참관하였으며,⁹ 포사격이 김정은의 군사대학 졸업논문에 기초해 지휘한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북한의 내부 교양자료에는 김정은이 포사격뿐만 아니라 2009년 4월과 5월에 진행된 ‘축포야회(불꽃놀이 및 무도회)’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모의실험까지 지휘할 정도로 선진기술에 정통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최근 평양시내에 등장한 선전포스터 또한 김정은의 후계자로서 업적을 선전하는 소재들로 활용하고 있다. 평양 제1백화점 앞에 설치된 컴퓨터 수치제어(CNC) 선전포스터와 작년 4월 열린 대규모 불꽃놀이인 ‘축포야회’ 장면과 장거리 로켓을 배경으로 한 포스터에는 “CNC와 세계를 향하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북한은 김정은 후계자 지명의 원년인 2009년을 ‘변이 난 해’라고 주장하며 김정은의 축포야회를 밝은 미래와 연결시키고 있으며, 작년 4월 광명성 2호

6 조선중앙방송, 2009년 10월 9일자.

7 조선중앙방송, 2010년 1월 8일자.

8 동아일보, 2009년 12월 11일자.

9 조선중앙방송, 2010년 2월 16일자.

또한 김정은의 선군업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작년 8월부터 전 산업시설에 CNC화를 김정은의 과학기술 능력으로 선전해 왔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정은의 후계자 정통성 확립과정은 과거 김정일의 정통성 확립 과정과 한 가지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김정일의 후계자 정통성은 김일성 수령의 혁명위업의 이상화하여, 자신의 충성심을 입증했던 ‘인물본위’에 중점을 둔 반면, 김정은의 후계자 정통성은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 보다는 수령과 장군의 아들이라는 혈통적 정통성이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과거 김정일이 자신은 수령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후계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혁명원로들에게 인정 받았다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것은 김정은의 후계체제 정통성이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리더십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은 당이다. “후계자는 당의 영도자이다”라는 것은 후계자의 영도체제가 당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당은 수령의 영도가 실현되는 ‘통로’이며, 수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맺어지는 ‘중추’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북한체제가 집단주의적 사회체제로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당의 지위와 역할과 깊은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당 조직이다. 그 중에서도 조직과 사상을 담당하는 중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김정일 영도체제의 핵심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핵심적인 권력 기제로 활용하였다. 당에 의한 조직사상기제, 배급제, 유일사상 10대 원칙, 당 생활, 주체사상 등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핵심으로 당 조직과 국가조직을 조종, 통제해 왔다.

그러나 1998년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함께 선군정치가 전면화 되면서 기존에 당의 지위와 역할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들어난 헌법 개정의 내용은 국방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최고령도자(100조)”로 내세웠다. 그리고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제3조)” 규정해 ‘선군사상’이 북한을 이끌어 가는 핵심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가주권의 구성에 있어서 “군인(제4조)”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북한이 선군국가이며, 국가주권의 방향이 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하였다.

북한은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선군 영도체제 또한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대회에서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또한 하루 전에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대장’에 임명함으로써 김정은의 선군리더십 확립을 통해 후계체제를 공식화 하였다.

선군정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선군헌법의 등장과 김정은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은 앞으로 김정은의 영도체제 구축이 과거와 다른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김정일의 영도체제가 당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김정은의 영도체제는 선군정치의 전면화에 따라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공간기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선

군 영도체계는 김정일의 당적 영도체계와 비교할 때 앞으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첫째, 군내 조직체계를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김정은은 선군 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또한 김정은은 향후 국방위원회와 국가안전보위부, 총정치국 등 군내의 더 많은 곳에 후계자의 지도체제를 세울 것이다. 현재 김정은 공식중인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으로 임명되어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의 영도체계가 먼저 당을 장악하고, 당을 통해 군대를 장악했다면 김정은의 경우에는 먼저 군에 대한 영도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김정은이 선군정치의 계승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군업적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군정치의 계승자로서 김정은의 이미지 구축은 이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군 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주체의 영군술’을 비롯해 군사학을 공부했다는 사실과 함께 시작되었다. 또한 북한 군대에서 2009년 5~6월쯤 배포된 것으로 판단되는 대외비 문건인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 자료’에서는 “의미 깊은 2006년 12월 24일,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증서와 기장이 기여된 자리에서 주체의 선군 혁명 위업을 빛나게 이으실 것을 바라시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⁰

둘째, 군과 체제보위 엘리트들이 김정은 후계체제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김정은은 후계체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제3차 당대표자대회 이후 체제보위세력을 이끌고 있는 장성택 행정부장과 신군부 엘리트들 이끌고 있는 이영호 총참모장이다.

장성택은 가장 넓은 권력 기반을 갖춘 인물로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 위원이다. 김정일의 친인척으로서 2008년 8월 이후 김정일이 와병 중에 위임통치를 경험과 향후 김정은의 후계구축의 후원자로서 역할을 부여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영호 또한 신군부의 새로운 지도자로 가장 강력한 권력 기반을 구축했으며, 김정은과 함께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이는 김정일과 김정은을 잇는 군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영호는 올해 68세로, 그의 등장은 북한 군부의 세대교체를 의미한다.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의 상장으로 승진하고, 국방위원이 된 것은 국가안전보위부가 반당·반체제 인사들과 사상 이반자들을 색출·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계체제의 안정적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의 정치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국방위원으로 임명된 것 또한 군내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후계체제 등장 이후, 북한 내 체제 불안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하위급 권력 엘리트의 이반과 주민의 동요 방지를 위해 군과 체제보위 기관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¹⁰ 정성장, “북한의 일제 타격식 포사격은 군 장악 나선 김정은의 작품?” 시사저널 (2010년 2월 24일자).

“후계자는 당의 영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원칙은 김정은의 후계체제 확립과정에서는 더 이상 지켜지기 어렵다. 권력의 중심이 당에서 군으로 변화되고 있는 북한의 권력체계 속에서 3세대 후계자는 선군의 영도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선군사상에 기반한 이데올로기 해석의 독점을 통해 자신의 영도체제의 정당성을 확립해야만 한다. 이러한 후계체제의 특징은 향후 김정은 영도체계 확립 과정에서 두 가지 큰 특징이 표출될 수 있다.

첫째, 김정은의 후계체제가 더욱더 폭압적인 구조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일의 영도체계는 당을 기반으로 한 통치구조이며, 높은 수준의 억압구조와 함께 높은 수준의 자발적 충성체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체주의적 특징¹¹을 갖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선군 영도체계 확립은 군과 국가보위부 등 공안기관 중심이 되어 폭력에 기반한 폭정국가¹²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군에 대한 후계자의 영도체계 구축은 김정일의 군통수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령이 살아 있는 동안 후계자의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북한 후계의 특징으로 인해 선군 영도체계는 수령과 후계자의 ‘권력 갈등과 딜레마’¹³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명백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3. 인민

북한의 후계자론은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또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영도체계뿐만 아니라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로서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묶어 내는 당의 역할, 즉 후계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지도와 대중의 결합 원리’를 제시하여, 당의 영도자인 후계자의 영도체계를 대중적 차원에서 확립하였다.

김정일이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라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통해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확립했다면, 김정은은 1990년대 이후 심각한 식량난과 ‘7.1 조치’로 인해 시장과 화폐라는 자본주의적 가치에 물든 인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김정은 또한 성공적인 후계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의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렇다면 당의 배급제가 붕괴되고, 당의 조직 및 사상 사업이 현저하게 약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김정은은 어떻게 인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체제 내에 집단주의적 가치가 무너진 계기는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난이지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도했던 2002년 ‘7.1 조치’ 때문이다. 실리주의에 기초한 7.1 조치의 단행은 시장화와 함께 북한 내에 화폐경제가 도입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¹¹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 58-67.

¹² 상동, pp. 79-83.

¹³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4 (July 2007), pp. 595-628.

가져왔다.¹⁴ 특히 시장의 등장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7.1 조치 이후 북한의 시장은 점차 활발하게 분화되어 전국에 걸쳐 8개의 도매 시장과 300여 개 도소매시장으로 확대되고, 상권이 형성되는 등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갔다.¹⁵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는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를 구성하는 북한의 집단주의적 가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주민들 간 계층의 분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화폐를 소유한 신흥부유계층이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빈부격차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¹⁶ 이러한 빈부격차는 지금까지 평준화 사회를 지향했던 북한 사회 내에 사상이 아닌 경제적 이유에 따른 계층의 분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점차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확대되었다.

북한 당국은 배급제가 끊겨진 상황에서 시장의 존재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을 사회주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지만 번번이 주민들의 반발로 실패로 끝났다. 결국 시장의 확대와 자본계층의 등장에 위기를 느낀 북한 당국은 최고 인민회의의 정령과 내각 결정에 따라 2009년 11월 30일 전격적인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화폐개혁의 대외적인 명분은 2002년 7월 1일 단행한 ‘7.1 조치’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지만, 김정일이 김정은으로의 권력을 세습하는데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시장 세력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극약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정일은 이미 2009년 9월초 내각의 무역성과 대외사업기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전해졌다.¹⁷ 김정일의 이러한 조치는 시장이 체제위기의 본질이라고 인식하면서부터이다. 특히 김정일은 2007년 7월 함북 연사군에서 이른바 ‘구호나무’¹⁸ 을 중국에 팔아 넘기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의 확산을 체제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2008년 6월 “시장은 비(非)사회주의 현상의 본거지”라고 비판하면서 시장화에 따른 체제 위기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물론 단기적으로 화폐개혁은 체제 위협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으나, 장기적으로 북한주민들의 반발과 충분한 물품의 공급으로 확대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공급 물량의 부족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식량공급 부족으로 인해 함경도 및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아사자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김

¹⁴ 최수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55-56.

¹⁵ 중앙선데이, “북한의 부자들,” 2009년 8월 2일자. 8대시장은 평양 통일거리시장, 평남 평성시장, 평북 신의주시장, 함남 함흥 사포시장, 함북 나선선봉시장, 청진 수남시장, 온성 온성시장, 회령 남문시장 등으로 주로 중국지역이나 중국 상인들이 들어오기 쉬운 항구를 끼고 있다. 8대 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에 300~350개의 시장이 있으며, 148개 군마다 1~2개, 27개 시마다 2~5개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¹⁶ 김보근, “북한 상인계층과 자본의 형성,”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2008년 북한연구학회, 통일연구원, 고려대북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2008. 12.4), pp. 40-43.

¹⁷ 중앙일보, 2009년 12월 17일.

¹⁸ 빨치산 대원들이 김일성과 그의 부인 김정숙을 찬양하는 글귀를 새긴 나무로서 수령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우상물이다.

정일은 화폐개혁 실패를 물어 북한 경제를 총괄했던 박남기 당 재정부장을 공개 총살 시켰으며, 김영일 총리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인민반 반장들을 모아놓고 화폐개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사과 했다. 김정일 자신도 노동신문을 통해 “아직 우리 인민들이 강냉이밥을 먹고 있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인민들에게 흰 쌀밥을 먹고 밀가루로 만든 빵이랑 칼제비국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수령님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우리 인민을 강냉이밥을 모르는 인민으로 세상에 내세우자”¹⁹며 ‘인민생활’을 챙기고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화폐개혁 후유증을 무마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폐개혁이후 주민들의 심각한 경제적 혼란은 그나마 주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던 수령-당-대중의 집단주의적 가치의 붕괴를 더욱 촉발시킬 것이다. 시장화의 확산에 따른 사유재산의 축적은 주민들에게 개인주의적 가치가 보편화되는 계기는 되었지만,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동요는 결국 체제에 대한 반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화폐개혁에 대한 반발은 향후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김정은이 인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첫째, 대중적 인기를 노리는 정책이 더욱 표면화 될 것이다. 김정일이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라는 혁명적 군중노선을 통해 이민위천(以民爲天)을 실현하는 대중적 이미지를 끌어냈듯이 화폐개혁 실패이후 김정은 또한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혁명적 군중노선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은 이미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통해 김정은의 군중노선을 확립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최근 화폐개혁 또한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하려 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그 책임을 당과 내각의 책임자에게 돌렸다. 지난 2월 21일 “북한이 ‘김대장의 배려금’ 명목으로 주민 한 사람당 새 화폐로 500원(약 3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화폐 개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김대장의 배려금은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둘째, 2012년 강성대국의 비전제시가 후계체제의 중요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다. 김정일은 인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통한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를 제시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과 2002년 7.1 조치 이후 시장이 보편화 되면서 의식주 문제를 당이 아닌 개인들의 능력을 통해 해결하게 된 이후,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적 가치는 현저히 약화되었다. 특히 화폐개혁 이후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북한 내 집단주의적 가치를 다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인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2012년 강성대국’의 비전 제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화폐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인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화폐개혁의 실패에서 보듯 북한 사회에서 시장은 이미 ‘비가역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인민들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듯이 당-정-군의 간부들 또한 시장에서 파생되는 뇌물을 통하지 않으면

¹⁹ 노동신문, 2010년 2월 1일자.

살아갈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주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책임을 떠 안고 있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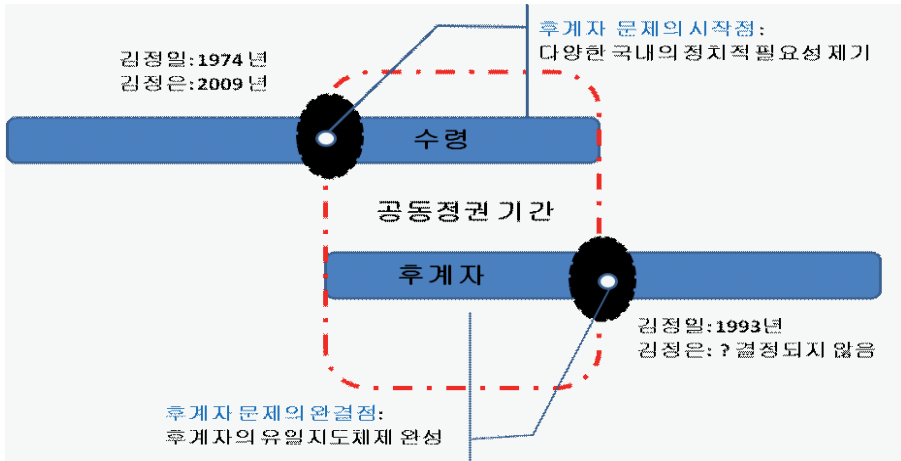
III. 김정은 후계체제의 세 가지 숨겨진 의미

북한의 후계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수령이 살아 있는 동안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북한만의 독특한 후계자 선출 방식이다. 북한의 이러한 후계자 선정방식은 후계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정권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두 지도자의 공존은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 후계자 문제의 본질적 의미

북한 후계자 문제의 본질은 “후계자의 선출뿐만 아니라 선출된 후계자가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²⁰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를 선출하는 것은 후계구도의 첫 단계이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제를 형성하고, 인민의 지도자로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림 1> 후계자 문제의 본질적 의미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수령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영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요구된다. ①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당내 ‘조직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② 조직공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간부(엘리트)들을 후계자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③ 후계자

²⁰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1989), p. 78.

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혁명적 기풍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새로운 규율과 사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²¹

둘째, 북한 후계자론은 “인민대중의 참된 지도자를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한다”.²² 라고 언급하고 있다. 후계자는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대된다. 이것은 혁명건설의 과정에서 지도와 대중의 관계에서 성립된다. 인민대중은 역사발전의 동력이며, 주체이지만, 수령과 당(후계자)의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따라서 후계자에게는 <그림 1>에서 보듯 두 시기가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수령이 살아 있는 동안, 수령의 보호아래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자신의 조직체계 구축, 인민대중의 지지 확립)를 구축하는 공동정권 기간이 있다. 두 번째 시기는 선임수령이 사망한 후, 본래의 의미의 수령의 역할을 맡는 시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수령의 후계자는 언제 등장하는가? 후계자 문제는 국내의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발생한다. 김정일은 소련과 중국에서 후계자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교훈을 계기로 등장하였고, 김정은은 지난 2008년 김정일의 건강악화를 계기로 등장하였다. 후계체제의 완성은 통수권의 핵심인 군권 이양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죽기 일년 전인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물려받음으로써 후계체제를 완성하였다. 2009년에 내정된 김정은의 경우 언제 마무리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공식 직책이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서 후계체제 시작단계에서부터 군권을 넘겨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 김정일의 후계체제 완성 시기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후계자 문제의 본질이란 첫 번째 시기, 즉 수령과 후계자의 공동정권 기간 동안 후계자가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후계자로 선출되는 것보다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를 만들고, 인민대중의 지지를 확립하는 과정이 더 어렵고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정일과 김정은 공동정권 기간이 충분하면 안정적인 권력 이양이 가능하겠지만, 김정일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 매우 불안정한 권력이양을 맞게 될 것이다. 후계자 문제의 본질은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등장한 김정은 후계체제가 왜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2) 후계자 문제의 구조적 의미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5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백만명 이상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도 1998년에 김정일 정권이 출범했다. 김정일은 과연 어떻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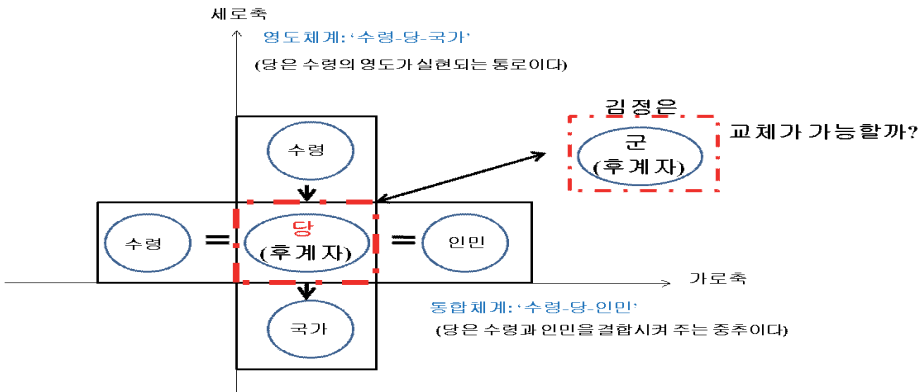
²¹ 이승열, 김정일의 선택1 (서울: 시대정신, 2009), p. 224.

²²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 35.

1967년 이후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을 ‘수령체제’라고 명명하고 있다. 수령체제는 김정일의 후계체제 과정을 통해 공고하게 확립되어왔다.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는 북한의 수령체제를 “수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²³ 이것은 수령체제가 이미 후계체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영도체계이다. 이것은 수령-당-국가체계로서 억압체제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통합체계로서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주민과 수령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체계는 억압체계보다 북한의 경제적 위기극복에 더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이 90년대 중반과 같은 극심한 위기에서 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던 이유는 수령-당-인민대중의 통합체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합체계는 무엇인가? 북한 주민들은 두 개의 생명이 있다고 믿고 있다. 첫째는 자연적 생명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주민들은 자연적 생명을 부모에게서 받는 반면, 사회정치적 생명을 수령에게서 받는다. 또한 전자는 유한하지만, 후자는 영원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생명이 그들에겐 더 중요하다.

<그림2> 후계체제의 구조적 의미



그렇다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수령과의 조직적 사상적 일치체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또한 수령과의 일치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 주는 당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바로 후계자인 것이다. 이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이론적 실체이다.

²³ 鐸木昌之, 『北朝鮮: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유영구역), 『김정일과 수령체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20.

북한의 수령체제, <그림 2 참조>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직이 바로 당이다. 그것은 혁명건설에서 당의 역할과 관계가 있다. 영도체제 내에서 당의 역할은 “수령의 지도를 실현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또한 통합체제 내에서는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중추”의 기능을 한다.²⁴ 그런 이유에서 “후계자를 당의 영도자로 선출한다”는 원칙이 정립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 후계체제를 위해 당의 지위와 역할을 군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과연 군이 당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 후계체제의 구조적 의미는 만약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의 주체가 당에서 군으로 교체된다면, 이것은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즉 정치변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인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의미하는 통합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억압체제만 남게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만약 북한이 과거 90년대 중반 있었던 위기를 다시 맞는다면 현재의 억압체제 만으로는 과거와 같이 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3) 후계자 문제의 정치적 의미

북한의 최고위 탈북자인 황장엽씨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 균형이 1985년을 기점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5년 이전까지를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으로 불렀고, 1985년 이후를 ‘김정일/김일성 공동정권’으로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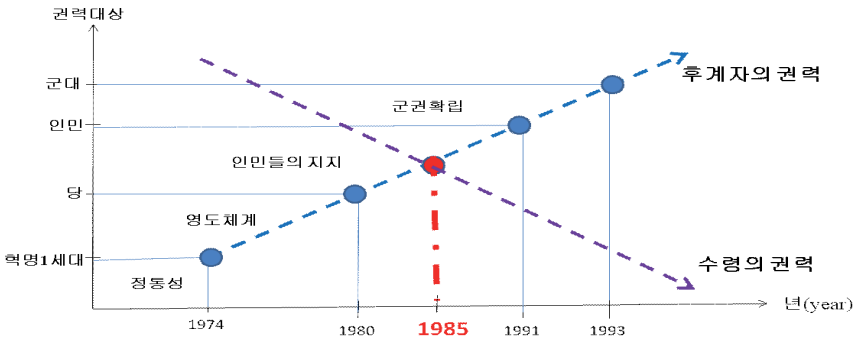
북한 후계자 문제에서 왜 이런 권력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수령이 살아 있는 동안 후계자를 선출하는 북한의 후계자 선출 방법 때문이다. 무엇보다 후계자 선출과 관련된 소련과 중국의 정치적 혼란은 당시 북한지도부에게 ‘후계자 문제의 우선적 해결’이 북한의 혁명건설의 완성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건임을 알게 해 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후계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령의 권력은 점차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 목표를 혁명 1세대, 당, 인민, 군으로 점차 확장하였다.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가 수령의 영도체제 내에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수령과 후계자의 ‘권력의 역설’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 후계자 문제의 정치적 의미는 바로 후계자와 수령의 힘의 균형점을 의미한다. 후계자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수령의 권력은 약화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뿐 권력의 역설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2세대(김일성과 김정일) 후계체제의 경우 1985년이었던다면, 3세대(김정일과 김정은)의 경우는 과연 언제일까? 지금으로서는 쉽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때가 온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후계자 등장의 정치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정일 자신이다. 김정일의 건강문제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등장시킨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만약 김정일에게 건강 문제만 없었다면 후계자 문제는 상당기간 수면위로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2008년 8월 뇌졸중 이후, 김정일은 2009년 1월 공식 무대에 복귀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삼남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이다.

²⁴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 50.

<그림3> 후계체제의 정치적 의미



그렇다면 김정일은 왜 세 아들 중 막내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선택했을까? 후계자가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형성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김정일은 후계자 시절 김일성의 보호아래 있었지만, 사실 그의 유일지도체제는 김정일 스스로 쟁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7년 갑산과의 숙청을 주도하고, 1970년 이후 김영주와 김평일과의 후계자 경쟁에서 혁명 1세대들의 도움을 이끌어냄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겨우 28살인 김정은은 어떤가? 과연 김정은에게 그런 정치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명된 것일까? 후계자의 정치적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 약화를 급격히 초래할 수 있는 후계체제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즉 권력누수 없는 후계체제를 원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의 세 아들 중 이미 당내 권력 기반을 갖추고 있는 장남 김정남과 둘째 김정철은 김정일의 후계 구상에는 맞지 않는 후보인 셈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만들어준 권력 테두리 안에서 후계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은 김정일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후계자인 셈이다.

IV. 결론

김정은 후계체제는 과거 김정일과 다른 점이 있다. 무엇보다 미래의 김정은 체제를 래를 결정할 변수가 좀 더 복잡해 졌다. 과거 김정일은 ‘포스트 김일성’을 결정짓는 절대적 상수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포스트 김정일’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 중의 하나이다.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문제로 인해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후계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 후계체제의 안정성은 수령의 영도가 실현되는 동안, 즉 수령이 살아 있는 동안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가 완성 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의 건강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시작 요인이면서, 동시에 불안 요인인 셈이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불안정성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은의 급속한 후계체제 구축은 수령으로서 김정일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과거 김정일의 후계자 정통성은 김일성의 혁명위업의 이상화를 통해 자신의 충성심을 입증하는 ‘인물본위’에 중점을 두었지만, 김정은의

후계자 정통성은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보다는 김일성의 혈통적 정통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김정일은 이를 위해 김일성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흉내내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북한 권력의 정당성이 김일성에게서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런 문제는 김정일이 후계자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김정일이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북한 후계체제의 정치적 의미는 수령과 후계자 사이에 권력의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령이 살아 있는 동안에 후계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것은 향후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김정일이 김정일의 권력을 능가하게 된다면, 김정일의 권력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김정은의 급속한 후계체제는 북한 파위 엘리트의 분화를 촉진하게 된다. 지난 제3차 당대표자대회이후 북한에서는 엘리트 다원주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오랜기간 동안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단일 엘리트 구조가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 이후 김정일 시대 혁명세대와 장성택 중심의 체제보위(감시)세력 그리고 이영호 중심의 신군부세력 등 세 집단으로 분화되었다. 그 결과 파위 엘리트 간의 경쟁구도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지난3차 당대표자대회 이후 김정은의 조직공간인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파위엘리트의 힘이 북한의 최고 권력 기구인 국방위원회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영호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군내 모든 수뇌들과 장성택 행정부장을 비롯하여 북한체제를 보위하는 보위부서의 엘리트들이 총집결하였다. 국방위원회 내 하드파워 엘리트 수는 총 6명(장성택, 김영춘, 오극렬, 주상성, 우동측, 김정각)이지만, 당중앙군사위원회 내 하드파워 엘리트의 수는 총 15명(이영호, 장성택, 김영춘, 김정각,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이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상려, 최경성, 우동측)으로 권력의 중심이 점차 미래 권력인 김정은의 당중앙군사위원회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엘리트 분화는 엘리트간 충성경쟁을 더욱 자극할 것이며, 이를 통해 누가 김정은 후계체제의 최대 수혜세력으로 등장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수령과 후계자 사이의 권력이양 변화의 의미를 의미한다. 이것은 수령과 후계자로 이어지는 권력 이동의 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촉발된 리더십의 변화는 수령과 후계자의 관계외에 파위 엘리트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된 것이다.

김정일의 건강문제로 인해 김정은으로의 권력이동이 과거 김정일의 후계체제 진행 과정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일이 수령의 영도체제의 핵심인 군통수권을 3대 세습의 첫 단계부터 김정은과 양분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군통수권이 매우 빠르게 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의 권력 역전 현상이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의 관계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권력이양 과정은 수령과 후계자의 권력 갈등과 딜레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명백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저자에 관하여

이화여자대학 통일연구소 상임 연구원이며 2011년 스웨덴 안보정책발전 연구소에 방문학자로 와 있었다.

저자는 2009년 북한대학원에서 북한계승문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2009년 “김정일의 선택”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그의 논문으로는 수령체제의 변화 (북한연구, 2009), 북한 계승체제의 세가지 결정요인 (북한 연구, 2010),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와 협상 분석 (평화연구, 2010).